

통합의회 100일...기반 구축 넘어 재정·균형발전 방점

시민 제감 중요...20조 재정지원 주목
차질 빚어지면 별도 특위 구성에 대응
조직개편 미완성...특별법 개정 추진
의원 전원 발의·의결 '반도체 조례' 성과
“첫 행감·예산안 심사...통합행정 점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가 출범 100일을 맞아 통합의 제도적 기반을 다지는 데서 나아가 재정과 조직, 지역 간 균형 문제를 본격적으로 점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송형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의장은 7일 시의회 전남청사 브리핑룸에서 출범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0일이 통합의회의 기초를 세우는 시간이었다면 이제부터는 그 토대 위에 시민이 제감할 수 있는 성과를 채워가야 할 시간”이라고 밝혔다.

의회가 가장 우려하는 현안으로는 중앙정부의 20조원 재정지원이 꼽혔다. 송 의장은 “중앙정부가 약속한 재정지원이 당초 계획대로 이뤄질 수 있느냐가 가장 큰 우려”라며 “20조원을 별도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지만 관련 입장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의회가 구성할 수 있는 3개 상설특별위



시청 간부 소개하는 閔시장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이 7일 무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본회의장에서 개최한 제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시청 간부들을 소개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원회 가운데 반도체·기본사회 특별위원회만 출범한 만큼, 나머지 한 곳은 재정지원 대응을 위한 카드로 남겨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송 의장은 “20조원이 1년에 5조원씩 제대로 내려오는 데 여의치 않다고 판단하면 바로 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통합 이후 옛 전남 농어촌 지역의 예산이 줄어드는지 여부도 중점적으로 살필 방침이다. 송 의장은 “옛 전남 농어촌지역의 예산 감소 여부가 주요 쟁점”이라며 “관련 예산이 줄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겠다”고 강조했다. 조직개편에 대해서는 “아직 미완성”이라고

평가했다. 향후 추가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임기 2년 동안 최소 두 차례가량 조직개편안이 더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특별법 개정도 본격 추진한다. 의회는 12개 위원회를 중심으로 특별법을 검토해 재정·산업·교통·농수산·환경·복지 등 8개 제도에

선 과제를 발굴했다. 앞으로 집행부가 발굴한 과제와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특별법 개정 작업에 나설 계획이다. 송 의장은 “특별법 문제가 해결돼야 완전한 조직개편이 이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100일간의 의정활동도 소개했다. 의회는 지난 7월1일 출범 이후 필수 자치법규 330건을 처리하고 사흘 만에 원 구성을 마쳤다. 제2회 임시회에서 155건의 안건을 처리했으며, 9월 정례회에서는 결산과 추가경정예산안, 조직개편안 등을 심사했다.

지방재 한도액을 초과해 발행하려던 271억 원에 대해서는 재정 건전성과 사업 타당성을 검토해 당초안을 부결한 뒤 수정안을 의결했다. 송 의장이 지난 100일간 가장 기억에 남는 조례로 꼽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글로벌 반도체 전략 투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재직 의원 10명 전원이 공동발의하고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의회는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와 2027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통합 이후 행정과 재정 운용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송 의장은 “통합 이후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 시민의 삶이 실제로 나아지고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볼 것”이라며 “지역의 다양성은 존중되되 지역 간 경쟁보다는 전남광주 전체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시민추천 부시장’ 백승주·윤난실 인사청문 통과

전남광주시의회 특위, 경과보고서 의결

전문성 긍정 평가...현안 이해 보완 주문

특별시 오늘 임명...즉시 업무 착수 예정

전국 최초로 시민추천 부시장제를 도입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 후보자와 윤난실 시민추천부시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마무리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6·7일 이틀간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뒤 7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각각 채택했다.

특위는 두 후보자의 경력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을 갖춘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청문 과정에서 드러난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와 정책 실행계획, 도덕성·준법성 등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백승주 후보자는 중앙정부에서 오랜 기간 재정·예산과 정책조정 업무를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특별시의 재정구조 개선과 중앙정부 재원 확보, 주요 정책 조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됐다.

반면대전환경기획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특별시 출범 과정에 참여했음에도 반도체 클러스터와 소재·부품·장비 산업, 공공기관 이전 등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농어촌·농수축산업 분야의 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도 보완 과제로 제시됐다.

도덕성과 준법성 측면에서는 배우자가 증여받은 농지 관리와 농지법상 의무 이행, 자녀의 과거 주민등록 이전 문제 등이 거론됐다. 특위는 백 후보자가 청문 과정에서 제기된 지적에 대해 개선 의지를 보인 점 등을 종합해 직무수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윤난실 후보자는 시민사회와 정당, 지방행정 자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쌓은 현장 경험과

정무적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 이해관계 조정과 의회 협치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았다.

특히 소통 부족에 대한 지적을 수용해 의회 사전보고 정례화, 당사자 중심 상설기구 신설, 공공사업 사전 협의 절차 도입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다만 시민추천 과정의 공정성 논란과 인사청문 요청 전 행정지원 문제, 반복된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해서는 고위 공직자로서 자성과 철저한 준법 의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명 이후에는 임명권자와의 관계보다 시민의 이익을 우선하는 독립적인 리더십과 복지·사회연대·청년 등 소관 정책의 실행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모두 마무리됨에 따라 특별시는 의회로부터 경과보고서를 전달받는 대로 8일 백 후보자와 윤 후보자를 부시장으로 임명할 예정이다. 두 후보자는 임명 직후 업무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최명진 기자

조직 통합했지만 전남광주시 첫 전보부터 ‘난항’

종전 근무지 보장에 인력 배치 제한적

광주→무안·동부 이동 직원 39명 그쳐

무안·동부→광주 43명...핵심부서 배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전보인사를 단행했지만 종전 근무지 보장에 따라 청사 간 인력 이동이 제한되면서 효율적 배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남광주특별시는 7일 광주청사와 전남청사에서 각각 기자 차담회를 열어 조직개편에 따른 5급 이하 전보인사 방향과 청사별 인력 배치 현황을 설명했다. 이번 인사 대상은 5급 642명, 6급 이하 2천195명 등 모두 2천837명이다.

특별시는 내년 1월 정기인사까지 3개월 밖에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전보를 최소화하고 조직개편과 승진에 따른 필수 인사 위주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실제 청사 간 이동 규모는 크지 않았다. 광주청사에서 무안·동부청사로 근무지를 옮긴

직원은 39명으로 5급 26명과 6급 이하 13명이다.

무안청사에서 광주청사로 이동한 직원은 34명, 동부청사에서 광주청사로 이동한 직원은 9명이다.

이 가운데 5급은 28명으로 기획실과 반도체산업 관련 부서, 시장상황실 등 주요 부서를 중심으로 배치됐다.

김선자 인사정책관은 “특별법으로 종전 근무지가 보장돼 직원들에게 이동을 안내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요조사를 하고 실적·가점과 원대 복귀 등을 안내했음에도 실제 수요가 아주 적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청사별 결원도 남아 있다. 무안청사는 정원 1천143명에 현원 1천43명으로 100명이 부족하고, 동부청사는 정원 394명에 현원 351명으로 43명이 부족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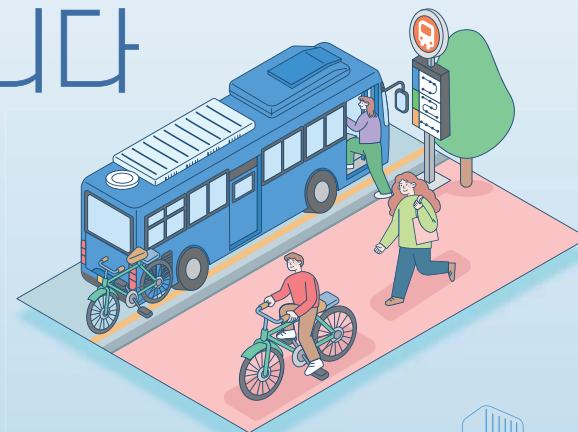
특별시는 앞으로 시·구·군 전임자와 신규 인력을 활용해 결원을 보완하는 한편 청사별 인사상담을 통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변은진 기자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광주교통문화연수원이 “대·자·보” 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 사업용 운전자(택시, 버스, 화물 등) 법정교육으로 대·자·보 시행을 위한 교통 문화 정착
- 어린이교통공원(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서는 유년 시절부터 “대·자·보” 교통안전 체험교육 강화
-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찾아가는 어르신교육으로 대자보 교통안전 의식 전환 운동
- TBN 교통방송과 함께하는 대자보 인문학 강의
-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과 협업을 통한 미래 기후 교통 환경 대응 역량 강화
- 학생(초·중·고) 교통안전교육을 통한 안전한 자전거·킥보드 문화 정착



교통안전캠페인



운수 종사자 교육



어르신 교육



학생 교육



어린이 교육